

1심만 3년째, 검찰 구형은 서면으로 ‘이상한 재판’

광주지법, 사기·변호사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서 검사 의견 제시 안해
징역 4년·추징금 14억 서면 의견
“공개재판 취지 막고 알권리 제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11개월째 진행 중인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두 의견 대신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해 법조계 안팎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의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이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어서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본보 6월28일자 4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이 판사 심리로 지난 8일 A씨에 대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은 검사가 판사에게 얼마의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마무리 수순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세 부 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억 3845만 원이다. 현재 A씨는 광주의 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구두 대신 서면으로 구체적인 구형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구형량과 구형 의견을 생략했다. 검사는 이후 지난 11일 검찰 의견서(구형 의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결심공판을 맡았던 광주지검 검사는 “구형량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 서면 구형을 신청했으나, 변경되지 않아 그대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범죄사실금액 추징금 14억 80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반드시 구두로 해야 할 법리적 근거는 없다. 서면 구형을 하는 경우에도 형량의 차이는 없다. 다만 당사자들 외에 형량을 알 수 없어 알권리 등이 제한된다.

특히 사회적 주목도가 높지 않은 사건에서 A씨 사례처럼 구형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아주 복잡한 사건이거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생각하거나, 형량이 알려지면 신상에 영향을 받는 정치·기업인, 검사가 구형 준비가 덜 된 상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다.

법조계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서면 구형이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또 서면 구형이라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개재판의 실질적 구

현이라는 측면에서 소송당사자들만 구형량을 알 수 있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이 비밀리에 열린다면 공정한 판결이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구형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일명 ‘채동욱 내연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형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지만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처음 열린 이 재판은 1심만 3년째 이어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

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은 해당 재판에 대해 “이렇게 오래갈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선고기일이 내년 2월 7일로 결정되면서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3년의 재판부 변경, 4번의 기일변경 등을 거쳐 총 3년 1개월 동안 진행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어린이 산타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20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산타복장을 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그동안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선물 꾸러미를 북구청 복지정책과에 전달하기 위해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지역 4세대형 MZ조폭 기승...“수사역량 집중”

국제PJ파 등 34명 등 기소
경찰청, 전국 1183명 검거

광주지역 조직폭력범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결과 30대 이하의 이른바 ‘MZ 조폭’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

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제PJ파 조직원 A(27)씨 등 34명(구속 5명·불구속 29명)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7억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 ‘MZ 조폭’들로 확인됐다. MZ조폭은 4세대형으로 분류되는데 ‘조폭’과 같은 1세대형,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진출 영역인 3세대형으로 발전했다. 4세대형은 2010년대 이후 등장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불법 사금융, 전세사기 조직 등을 일삼는 이익 추구 범죄집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해 효과적인 범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MZ세대 조폭 중심의 조직성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하반기 검거한 조직폭력범 1183명 중 ‘MZ 조폭’이 75%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7일~12월 16일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18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44.6% 늘었고 구속된 피의자도 19.6% 증가했다.

연령별로 30대 이하(10~30대)가 888명(7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뒤이어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

(7.2%)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MZ 조폭’의 경우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았다. 최근 신규 범죄 조직 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송민섭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